

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사

“국민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

“국민의 힘으로 역사 전진 경험 민주주의 후퇴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민주항쟁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니다”라며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舊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거행된 제33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일한 나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찾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2007년)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제3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됐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날과 같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 6·10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 간 열사들을 기린다”며 “33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윤덕 의원 ‘전주 특례시법’ 대표 발의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시갑)은 10일, 21대 국회입성 후 제1호 법안인 ‘전주 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 전북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 “이는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 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전주특례시 문제는 지난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면서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고 전주시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부 차원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 요청

신영대 의원, 정세균 총리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신영대 의원(군산)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0일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총리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탄천 회동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전북도 국회의원 탄천 회동에서도 정 총리에게 친견(親見)을 전달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과 전북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문



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발주 물량 확보 및 현대중 수주 물량 블록 배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현안 해결에 행정부도 힘을 모아 달라는 뜻을 국무총리께 전달했다. 군산과 전북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의가 지속해서 이뤄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부처와의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 등을 조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초심자의 의정활동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동학농민혁명·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 돼야

윤준병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교창군)은 10일,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아목에 대항한 국민수호운동이자 민주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한 우



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획을 그은 사건으로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웠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시민주혁명으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野 계속 방해하면 12일 단독 개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을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며 야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작전에 들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시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해서 수출 부진으로 고용 개선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상임위 배정을 갖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안 된다”고 했다.

김태연 원내대표도 “야당이 원구성 지연 풍수를 부린다고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국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뉴시스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의회 도정 질문

전북형 뉴딜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10일 열린 37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초점을 맞추어 선제적이고 빠른 전라북도만의 맞춤형 뉴딜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이번달 말 내놓을 한국판 뉴딜에 앞서 광주의 경우는 ‘인공지능(AI)뉴딜’, 부산은 디지털 산업에 기반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

전북도가 출원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도의회와 협의 없이 개최하지 않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의원은 10일 열린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최근 도의회 청문회 개최 없이 두 차례나 기관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의회 의장은 도 산하기관 등의 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곧바로 2개월 뒤에 이어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도입된 인

“전북형 뉴딜정책 서둘러야”

문승우 도의원 “정부 추진중 디지털·그린뉴딜 초점 맞춰”

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뉴딜사업을 내놓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또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비유이나 산업별 분포, 추가로 유치해야할 산업군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처방을 위해 지역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018년 11위,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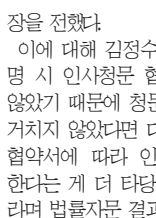
“인사청문회, 의회와 협의해 열어야”

김정수 도의원 “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 강행”

송하진 도지사,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 약속



3조 여의 규정에 따라 연임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청문요청 없이 임명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은 “처음 임명 시 인사청문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면 다시 연임되더라도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게 더 타당한 법률해석이다”라며 법률자문 결과를 인용했다.

/유호상 기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간담회 추진을”

이명연 도의원, 광역이동 지원센터 문제점 지적 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열지 못해”



다고 지적, 향후 전북도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자, 시군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행자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11월 운영이 시작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

촉한 실정이었는데, 올해 단 18대만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법정대수 대비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시군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자간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나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기적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시군이 2023년까지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호상 기자

거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